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박병인(경남대학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정치·경제 제도, 중앙정부의 참여 의지와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러 간의 협력 진전, 북한의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더욱 진전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두만강 지역이 동북아 개발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두만강 지역에서 불고 있는 일련의 협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매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두만강 지역,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RADP), 북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B00005)

1. 서론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가 주도하는 두만강 지역 개발은 초국가적 거버넌스 활동의 주요한 사례이다. 이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정치가 첨예하게 확보하는 동북아 역내에서 공동 협력의 싹을 키우고 있다. 이 논문은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1991년 UNDP 주도하에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 일본 등 6개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협력의 서막을 열었다. 25여 년 4반세기 동안 두만강 개발은 당초 기대했던 목표와 실제적인 발전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두만강 지역 접경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다자적 공동사업인 두만강 지역 개발은 중앙정부보다는 각국의 지방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영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형태이다. 한때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동북아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근대의 모순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동북아는 역내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동체의 꿈은 아직 진행형이다. 이때 지난 세기 1991년에 시작된 두만강 개발협력 거버넌스가 국가 차원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지역 협력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 협력의 메커니즘에서 매우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협력보다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로서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은 1991년 이래 3단계 사업을 끝으로 역할을 마무리하고

2005년 장춘회의를 통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거듭났다. 그간 북한은 회원국으로 활동했으나 2009년 GTI 회원국을 탈퇴하면서 역외국으로 남았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 개발이라는 거시적 차원에는 접경 지역에 꾸준히 투자 여건을 정비해왔다. 비록 북한이 GTI라는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 내에서 참여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지역의 특수한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들은 북·중, 북·러 등 양자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본격적으로 논지를 전개하기에 앞서 이제까지의 유관 선행연구 중 대표적인 논문과 단행본을 살펴보았다. 윤승현¹⁾은 두만강 지역의 개발확대가 환동해권의 확대와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동북아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박동훈²⁾은 두만강 지역 역내 주요국가 가운데 중국의 시각과 정책적 정향을 파악하였다. 임을출³⁾은 북한의 동북아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법제적 측면에서 수행하였다. 조명철·김지연⁴⁾은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범식⁵⁾은 동북아 소지역협력이 중국 주도형의 경직된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기보다는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
- 1) 윤승현, 『두만강 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강원: 강원발전연구원, 2009).
 - 2) 박동훈, “두만강 지역 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2010).
 - 3) 임을출,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 4) 조명철·김지연,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서울: KIEP, 2010).
 - 5)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2013).

북한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이외 다수의 논문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두만강 개발이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북한이 동북아 협력 및 두만강 유역 개발에 어떠한 시각을 통해 접근하고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논문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최근 북한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움직임, 북·중 협력 동향 및 북한 접경지대인 나진·선봉 지역 등의 개발환경 조성정책 등에 대하여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지하다시피,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참여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 공간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논문은 제2절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두만강 지역, 제3절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포괄적 인식, 제4절은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제5절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두만강 지역

1) 두만강 지역에 대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작동

두만강 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이 지역의 발전은 동북아 및 아·태 지역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두만강 지역에 대한 지리적 범위는 광의와 협의로 구분된다. 광의의 두만강 지역은 중국동북지구, 몽골, 러시아 극동, 북한과 한국의 서해안을 포괄한다. 협의의 두만강 지역은 소위, 대삼각과 소삼각으로 구분한다. 대삼각 지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옌지 시, 북한의 청진시를 두만강 경제개발구로 칭하고 있으며, 면적은 1,000km²이다. 한편 실질적 개발 지역은 ‘소삼각’이다. 소삼각은 북한의 나진, 선봉,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 3개 시가 소삼각을 이루며 면적은 100km²이다. 두만강의 지리적 위치의 특수성, 각종 자원의 풍부성, 자연경관의 우수성은 세계에서 가장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이러한 두만강의 지역적 특성은 학자들의 관심은 물론 각 정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UNDP는 이 지역을 동북아 지역에 관한 4개 분야 제5차 중점 예산 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는 정부 간 개발 협력 사업으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다자간 개발협력 구상의 경제적 보완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6) 毛健·劉曉輝·張玉智, “圖們江區域多邊合作開發研究,” 『中國軟科學』, 第5期(2012), 80~81쪽.

한국과 일본의 자본을 러시아 극동 지역, 중국 동북 지역, 북한 등의 지역에 투입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검토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러시아 시할린 석유 및 천연 가스 개발, 야쿠츠크와 이르쿠츠크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중국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삼각 평원 개발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된 중국, 러시아, 북한 3국의 접경 지역을 국제적으로 개발하지는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⁷⁾

이렇게 두만강 지역이 국제사회의 주목과 검증은 거치는 가운데 1991년 10월 24일 UNDP는 뉴욕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제사회를 향해 두만강 유역 삼각주를 개발할 것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이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⁸⁾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 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한 바 있다.⁹⁾ 즉 라오닝 성(遼寧省), 지린

7) 윤승현, 『두만강 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8~9쪽.

8) GTI는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 간 협력체계를 의미하며, 동북아시아 경제개발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중국 상무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몽골 재무부 등 4개국 정부 경제부처가 참여한다.

9) 조명철·김지연,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3쪽.

성(吉林省), 헤이룽장 성과 각 성의 특성에 부합하여 실행에 나서고 있다. 랴오닝 성은 ‘5점 1선’ 계획, 지린 성은 ‘창지투 사업’ 계획, 헤이룽장 성은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랴오닝 성의 ‘2대 기지, 3대산업’ 발전전략, 지린 성의 ‘5대 기지’ 발전 전략, 헤이룽장 성의 ‘6대 기지’ 발전전략으로 확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 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 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¹⁰⁾ 북한은 두만강 지역 및 나선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사업성과 및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현재 비회원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GTI 사업에 포괄적 연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2) 두만강 지역 개발환경과 정체 요인

두만강 지역이 개발 초기의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미발전 상태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변 환경 요인이 지역 발전과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10) 제성훈 외,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서울: KIEP, 2014), 233쪽.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대소련 채무탕감 관련 협정 비준, 교역대금의 루블화 결제, 나선-하산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11) 王衍達, “圖們江開發困境中的地區環境原因探析,” 『理論探索』, 總第302(2011), 84쪽.

첫째, 지역 주변 환경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이다. 어느 지역의 개발이나 마찬가지로 두만강 지역의 개발도 안정적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한다. 과거나 현재 동북아 정세는 종종 긴장된 국면을 연출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는 단기간에 긴장이 완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안정은 개발과 협력의 공간이 펼쳐지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두만강 지역은 접경지대로서 지정학적 민감성이 존재하면서 관련국의 태도가 불명확하고 정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관련국들이 지역 개발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게다가 두만강 지역은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두만강 지역의 주변 정세는 개발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두만강 지역의 접경국 및 인근 지역의 발전 정도가 미약하다. 지역성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여력이 있는 주변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 자체는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접국 및 인접 지역의 미약한 발전 정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²⁾ 특히, 북한은 비개발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국의 극동 지역 개발에도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그나마 개발여력이 있는 일본과 한국은 투자관심이 주로 중국연해지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두만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보더라도 두만강 지역은 동아시아 핵심 경제지대가 아니다. 두만강 지역이 인접한 것은 동해이고, 동해 지역 국가 중에서 러시아는 극동 지역 인구가 희소하고, 북한은 경제력이 약하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일본과 한국도 동해에

12) 夏莹·魏景賦, “中俄朝經貿合作現狀, 問題及展望-基于圖們江區域開發的視點,” 『商業經濟』 第10期(2012), 66쪽.

인접한 한국 동부와 일본 서부 지역은 해당 국가에서 발달된 경제 지역이 아니다.

셋째, 지역 내 국가 간의 교류에 장애가 있다. 우선 북한은 패쇄 국가로서 전체적인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도 개발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핵심 지역인 지린 성이 폐쇄국가인 북한과 접하고 있어 실제로 고립된 지역처럼 되고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략 중심이 유럽이다. 최근 푸틴3기 정부가 극동개발부를 설치하면서 러시아 동부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그 실질적 여파가 두만강 개발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두만강 지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불리한 여건에 교류의 문제까지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개발과 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 금융과 투자문제이다. 금융위기 후 각국 정부는 본국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집중하느라 두만강 개발을 위한 지원과 투자에 역력이 없었다. 북한은 미국에 의한 대북적대시 정책 등의 유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북핵 문제로 더욱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세계은행 회원국이지만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점도 지역 개발을 위한 금융과 투자자본 유입을 어렵게 한다.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포괄적 인식

1)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이해의 충돌

북한은 외국 투자자본의 유용성과 종속의 위협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경제발전을 위한 이해관계가 언제나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경제회생과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유용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국제사회의 투자를 실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제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¹⁴⁾ 이는 특히 ‘경제무역시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¹⁵⁾ 게다가 선진기술의 도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은 낙후된 자국의 과학기술을 선진국과의 협력 속에서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투자에 대하여 경계심을

-
- 13) 김철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지역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0권 제1호(2014), 9쪽. “자립경제건설의 주인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원료와 자재, 자금과 설비, 기술 등을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충족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 14) 이정경,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4호(2012), 49쪽. “다른 나라의 투자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리용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을 옳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 15) 유철남, “경제무역시대에서 금융업조직의 일반적 원칙,” 『경제연구』, 제4호(2014), 50쪽. “경제무역시대에서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내의 생산적 자원의 리용을 위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본을 기본원천으로 발전하는 경제지역이다. 이것은 해외투자자들의 경제적 리익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부단히 갱신, 완성할 때만이 가능하다.”
- 16) 김동식, “현 시기 선진기술도입전략에 기초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2011), 40쪽.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과학기술을 끊임 없이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금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드러내며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⁷⁾

그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리용하는데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투자를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를 잘 알고 그곳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¹⁸⁾

만약, 경제발전을 통한 국익의 증대와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주의 원칙이 충돌한다면 정치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경제적 이해는 다소 부차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¹⁹⁾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이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도이다.”

- 17) 박춘화,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1호(2014), 9쪽.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일시적인 난관 앞에서도 동요하거나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원칙에서 이탈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정영섭,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3호(2012), 5쪽.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생명선이며 사회주의원칙에서 벗어나면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 건설과 경제생활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 18) 이정경,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49쪽.
- 19) 최광호, “대의무역에서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1호(2012), 39쪽. “사회주의국가가 정치적 리익과 경제적 리익의 호상관계를 풀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는 정치적 리익을 실현하는 기초 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치적 리익을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무적인 경제문제일지라도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사회주의 정치운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²⁰⁾ 이는 향후 북한이 대외정책과 개혁개방 실행에서 체제보호 우선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제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²¹⁾ 이는 비록 근래 정상화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 2013년 4월부터 6개월간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개성공단사태에서 표출된 바 있다.

한편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대세이자 가장 일반적인 국제사회와의 교류 형태인데, 북한은 혹여 자신들이 양육강식의 국제경제 생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²²⁾ 그러면서도 외국 투자가 일반적으로 개

실현하는 기초 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인민대중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다.”

- 20) 정영섭,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5쪽.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의 운명,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최광호, “대외무역에서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38쪽.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21) 김세영, “대외경제교류의 경제적 효과 타산에서 지켜야 할 중요원칙,” 『경제연구』, 제1호(2015), 53쪽. “대외경제교류의 경제적 효과 타산에서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철저히 의거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적 요구로 된다.”
- 22) 채광진, “국제대부와 그 형태,” 『경제연구』, 제2호(2012), 56쪽. 국제대부형태들은 지난날 금융업이 발전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발생하고 국제대부를 통한 자본의 침투로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약탈하려는 제국주

발도상국 경제발전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²³⁾ 외국 자본을 경제발전과 선진기술 취득에 활용하되 북한 경제가 외국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영과 판매 등 기업활동의 주체성은 지켜야할 가치로 인식한다.²⁴⁾

이러한 사회주의 가치 우선의 인식은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경제무역지대’에서 금융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경제 무역지대에서는 국가의 정치, 경제적 리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금융관리방법이나 질서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금융분야에 침입되어서는 안 된다.²⁵⁾

이와 같은 자본주의 운영방식에 대한 몰이해와 시장경제에 대한 고

의지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서 발전되어온 것으로 하여 불공평한 국제경제질서를 다분히 담고 있다.

- 23) 리명숙, “국제투자의 역할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제3호(2012), 119쪽. 현 시기 발전도상 나라들뿐만 아니라 발전된 나라들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외국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 형태와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투자도입국에서 외국투자를 잘 리용하면 그것이 나라의 경제기술적 발전에서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4) 위의 글, 120쪽. 그러나 외국투자를 잘못 끌어들이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예측될 수 있다. 또한 외국투자는 투자도입국의 주요 경제 명맥들이 외국 자본가에게 장악되고 그를 통한 생산과 판매, 경영활동이 외국 자본가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25) 유철남, “경제무역지대에서 금융업조직의 일반적 원칙,” 50쪽.

압적 태도는 해외투자 유입이 활성화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 자본주의국가와 국제금융기구의 개발협력(지원)에 대한 의구심

북한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기본적으로 착취적 및 약탈적 성격으로 규정한다.²⁶⁾ 또한 서방국가의 대외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에 대해 경계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방국가의 대외정책을 기본적으로 타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를 집행하는 국제경제기구도 순수한 투자 및 원조활동 외에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지배와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에 매달리면서 보다 은폐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약탈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²⁷⁾

국제경제기구가 표방하는 규정과 활동목적에는 협력, 원조와 같은 미사려구가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발전도상나라들을 국제경제기구에 얽매어 놓고 경제적 지배와 약탈을 손쉽게 보장하는 것이다.²⁸⁾

26) 리경영, “자본주의국제질서의 착취적 및 약탈적 성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1호(2014), “불평등한 자본주의국제무역질서를 통한 착취와 약탈은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 나라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27) 김혜선, “제국주의적 경제기구의 침략적, 약탈적 성격,” 『경제연구』, 제4호(2011), 59쪽.

오늘 세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경제기구는 미제의 금융적 지배의 도구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다.²⁹⁾

이렇듯 북한은 국제금융기구가 신용과 용자를 도구로 하여 대상국 경제정책에 관여하면서 그 사회의 경제적 성격과 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으며,³⁰⁾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를 실행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적 지배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³¹⁾ 국제경제기구는 미국과 서방국의 통제하에 있으며 경제원조를 매개로 수원국 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특히 1980년대 말 소위, ‘세계화’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수원국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진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³²⁾ 개발도상국들에게 자본의 국제화는 대외채무의 증

28) 위의 글, 60~61쪽.

29) 심은심, “세계경제를 연구하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2014), 54쪽.

30) 계춘봉,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도적 역할론,’” 『경제연구』, 제3호(2005), 37쪽.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도적 역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금융기구들이 자금용자와 신용대부라는 경제적 공간을 리용하여 발전도상 나라들의 정부와 계획기관들의 활동에 간섭하며 발전도상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맺는 경제적 관계의 성격과 방향을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1) 박정철, “현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외경제정책의 특징,” 『경제연구』, 제2호(2011), 63쪽.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자본주의열강들의 교활한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경제원조 정책을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32) 최성일, “미제가 제창하는 ‘세계화’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제4호(2007), 42쪽.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경제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강행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을 전후로 한 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과 민족들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무역기구’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의 신식민주의적인 신탁통치를 받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가 속에서 대외의존을 강화하고 정치적·경제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³³⁾ 이는 미국이 세계지배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반서방 성향의 국가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³⁴⁾

오늘날 개발도상국 원조를 실행하는 OECD, IMF, IBRD 등은 미국 및 서방국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국외 지배력 확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이를 ‘조약’ 또는 ‘협약’의 이름을 합법화하는 가운데 그 침략적 속성을 은폐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를 통해 수원국 민족산업은 침체되고 그 공간을 서방의 이익이 채우게 되며 수원국 정부의 해외유출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본다.³⁵⁾

여러 나라들에서 시장경제제로의 이행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때

-
- 33) 리경영, “자본의 국제화에 의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처지의 악화,” 121쪽. “자본의 국제화에 의한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대외채무의 끊임없는 증가는 이 나라들의 경제적 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제국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첨예화시키고 제국주의멸망을 다그치게 한다.”
- 34) 김혜선, “국제경제기구와 그 성격,” 48쪽.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들로 조직된 국제경제기구, 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국제경제기구들은 레외없이 반동적인 기구들이다. 그것은 이러한 기구들이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가로막고 낡은 국제 경제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며 진보적인 나라들에 대한 경제봉쇄책동의 도구로 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35) 위의 글, 49쪽. “제국주의자들이 해외경제적 팽창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국제경제기구를 조작하고 리용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과 약탈행위를 국제적인 ‘협약’이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방함으로써 그것을 ‘합법화’하고 저들의 ‘원조’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자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측하고 이 나라들의 민족산업을 파괴하며 막대한 자원을 약탈하여가고 있다.”

를 같이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은 그 무슨 ‘경제협력’과 ‘원조’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³⁶⁾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화’에서 의거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광고하는 개발 ‘원조’와 ‘자본시장’, ‘과학기술’과 ‘정보의 이전’ 등은 ‘문명보급’이 아니라 발전도상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고 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병주고 약주고격의 함정이다.³⁷⁾

이러한 예로 북한은 1970년대 아프리카에 대한 서방의 원조를 든다.

1970년대부터 미제는 차관형식의 ‘원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시기 미제가 차관형식의 ‘원조’에 매달리게 된 것은 자본주의 세계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재정경제적 위기와 관련되었으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금수요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차관형식의 ‘원조’로써도 이 나라들(*아프리카나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측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타산한데 있었다.³⁸⁾

36) 『김정일선집』, 제10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1), 503쪽.

37) 리신효,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세계화’의 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경제연구』, 제1호(2006), 54쪽.

38) 량봉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4호(2011), 82쪽.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락탈과 예측의 올가미이다(『김정일선집』, 제14권, 329쪽).”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유용성과 종속성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기본적으로 종속성과 약탈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인식상의 편협함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북한의 전폭적인 대외개방의 흐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적인 경제운영과 대외협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지켜보아야할 과제이다.

4.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1) 동북아·두만강 지역 협력에 대한 인식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포괄적으로 기대보다는 우려의 관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무역지대’ 활성화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 증진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특히 동북아 역내 협력 및 두만강 지역 개발에서는 북한의 인식이 기대와 활용의 모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은 GTI 회원국을 탈퇴하여 비회원국이며,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은 개별적·양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탈퇴는 핵개발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에 따른 관계 악화와 GTI 가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의 부재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북한이 GTI 회원국은 아니지만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개별적 협력채널을 가동하면서 포괄적으로 두만강 지역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두만강 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지만 투자, 개발, 개방의 확대는 체제안정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우려하고 개발과 개방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나름대로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협력과 두만강 지역 개발 사업에 유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의 2013년 2월 논문³⁹⁾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⁴⁰⁾ 논문은 동북아의 경제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로 ‘하부구조(인프라)’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꼽으며 과거 동북아시아개발은행 창설, 정부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었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내에서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들에 의한 필요한 자금의 보장,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이용, 나아가서 지역 내 새로운 은행이나 기금을 창립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해결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문은 현실 가능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동북아 지역 내 공동관광계획을 작성하고 관광협력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는 등 관광사업 협력을 주장하는 한편 동

39) 황금해, “동북아시아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제1호(2013), 36~37쪽.

40) 북한의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은 북한의 대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박춘호, “아시아 나라들과의 대외 경제협조관계의 특징,” 『경제연구』, 제2호(2013), 57~58쪽. 김홍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2호(2014), 113~117쪽. 리철성, “최근 시기 동아시아지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협력과 그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호(2013), 126~129쪽 참조.

북아시아경제공동체와 같은 전 지역적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연이어 최근 발표한 논문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의 핵심 지대로 두만강 지역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⁴¹⁾ 이 논문의 발표기관인 사회과학원은 북한 당국의 중심적 연구기관으로 이는 북한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찍이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GTI를 탈퇴한 이래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인식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논문은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20여 년 동안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주요 다국(多國) 간 협력 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두만강 지역 개발과 그 확대판인 대(大)두만강 지역 개발”이며, 이와 더불어 “그 뒤를 이어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 부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조선 종단 철도의 연결 등이 주목되는 협력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러 간 가스관 및 철도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근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월이 주변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 주목되는 사안이다.

또한 논문에서는 두만강 지역 개발의 정치적 의미도 간과하지 않으면서, 다자간 협력사업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⁴²⁾ 게다가 협력의 대상으로 ‘조선반도’를 거명함으로써 남한

41) 리행호,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 『사회과학원 학보』, 제4호 (2014), 43~44쪽.

42) 위의 글, 43쪽. “조선반도는 정치 군사 정세가 긴장되고 경제적 대립도 심한 반면에 여러 면에서 경제적 잠재력이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관계에도 대단히 편리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적극 참가하게 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 참여도 배제하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북한이 탈퇴한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인 GTI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협력의 중점 지역으로 두만강을 언급하는 것은 향후 북한이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GTI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두만강 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⁴³⁾ 이는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조치가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사업이 유용할 것이라는 북한 인식의 반영이며, 주변국이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는 두만강 지역이 고립의 탈피와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북한은 두만강 지역 개발의 세부적 측면에서 나진-선봉 지역 개발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엔경제기구들이나 외국 전문가들의 타산에 의하면 두만강삼각지대를 통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물동량이 전망적으로는 약 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특히 이를 위한 통로로 다음과 같이 나진-선봉 지역을 지목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⁴⁴⁾

동북아시아의 지리적중심이면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직접 해륙으로 린접되어 있는 라선경제 무역지대는 동북아시아나라들과 아시아와 유럽을 련결하는 해륙련대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교

43) 위의 글, 43쪽. “1990년대에 동북아 나라들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일정한 거점, 중심지를 먼저 개발하고 그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로부터 그런 거점, 중심지를 바로 두만강 지역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44) 김금희, “국제적인 화물중계수송기지로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유리성,” 『경제연구』, 제4호(2014), 47~49쪽.

통로, 대륙교의 교각, 교두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전반적인 동북아 협력과 두만강 지역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고립된 경제의 활로 개척과 ‘경제강성대국’을 이루려는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다. 강조하는 사업들이 다자간 협력사업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전향적인 변화와 태도로 인해 북한의 비적극적 태도로 활로를 찾지 못하는 GTI를 포함해 두만강 지역개발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2) 북한의 대응

(1) 대외 협력적 측면

① 북·중협력의 정체와 모색

한때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기능하던 북·중협력이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과 12월 장성택 처형 등으로 정체 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북한은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나진항의 협력개발 및 관련 도로의 개·보수에 중국과 동의한 바 있다. 2010년 11월 19일 북·중 양국은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및 위화도 경제지대를 공동 관리·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서 2011년 6월 9일 북·중 공동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인접한 나선지구를 국제적인 중계무역지구, 수출가공구 및 금융센터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나선특별시를 개발할 때 과거와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력

으로 나선특별시 개발이 불가능한 북한은 중국의 대북투자를 유도해 나선특별시를 대외무역 전진기지로 개발하려는 의향을 내보인다. 중국 또한 나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 3성의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 물류망을 확보하여 향후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하려는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다.⁴⁵⁾ 이처럼 양측은 기본적으로 상호협력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는 등 군사적·정치적으로 ‘강성대국’ 입지를 다진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경제적 차원에서의 강성대국을 실현하고자 한다.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두만강 지역에 대한 주변국과의 협력과 개발은 ‘경제강성대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⁴⁶⁾ 따라서 가장 인접한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협력은 현재와 같은 단기적 정체 국면을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관광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 측에 투자 유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 지역인 두만강 국경지대에 국제관광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⁴⁷⁾ 두만강 국제관광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취약한 산업 인프라를 재건하는 대신에 단기적인 외화벌이 수단을 마련한다

45) 조명철, 김지연,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100쪽.

46) 金祥波·王禹, “双赢戰略: 中朝圖們江區域合作与開發.” 『延邊大學學』, 第45卷 第4期 (2012), 33~34쪽.

47) “圖們江開發合作納入國家區域旅游一体化戰略.” <http://finance.sina.com.cn/roll/20141129/001920951943.shtml>(검색일: 2014.11.29).

는 계획이다. 향후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무비자 출입과 면세 쇼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대부분은 저렴한 관광지로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일본, 몽골에서도 고속도로, 철도, 항공로를 이용해 관광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⁴⁸⁾

그리고, 2015년 말까지 북·중 간에는 중국에서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가는 관문인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 시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는 1936년 세워진 총연장 535m의 취안허-원정리 두만강대교를 대체하는 것으로, 신두만강대교는 638m의 교량구간과 접속도로를 합쳐 총연장 1,100m,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되어 향후 증대되는 양국의 교역 물량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⁹⁾

이와 같은 북·중협력의 모습은 2014년 말 이래 모색되어왔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중관계와 관련해 ‘관계 개선’, ‘원조(援助) 재개’, ‘지방 위주’의 세 가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⁵⁰⁾ 2015년 3월 8일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恩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왕 부장은 3월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0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를 쇄신·개선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국제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제관계 인식은 일시적 정체기에 빠진 북·중관계에 새로운 교류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48) 중국 신화통신사. <http://kr.xinhuanet.com/>(검색일: 2015.02.13).

4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1/0200000000AKR20150211048000097.HTML?input=1195m> (검색일: 2015.02.11).

50)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0/2015031000411.html(검색일: 2015.03.10).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토대로 북한의 대중국 접근이 가속화되면 두만강 지역의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북한은 국제기구 참여와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UNDP가 주도하는 GTI 사업에는 불참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사업에는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지리적 요인도 있겠지만 한국과 단절된 경제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비록 중국과의 협력을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택했지만 북한 나름대로 ‘의존의 위험’은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최근 대외관계의 다변화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밀월의 북·러 협력

최근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측면은 러시아와의 밀착 현상이며, 다양한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⁵¹⁾ 이러한 인식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간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2014년 3월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Rustam Minnikhanov) 대통령과 극동개발부 알렉산드

51) 김상하, “로씨야 원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 『경제연구』, 제4호(2013), 55쪽. “원동지역의 경제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가 로씨야, 특히 원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해주고 있다.” 김상하,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제1호(2014), 23쪽. “우리는 로씨야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거래를 해온 풍부한 경험과 토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에 토대하여 로씨야와의 무역 특히 원동지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 들어야 한다.”

르 갈루쉬카(Aleksandr Galushka) 장관은 북한을 방문하면서 인적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텃다. 특히 갈루쉬카 장관은 방문 기간에 정체 상태에 있는 양국 교역액을 2020년까지 지금의 10배인 10억 달러로 확대하고, 향후 양측 교역 시 현재 결제통화인 유로화를 루블화로 대체하는데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만성적인 국제경화 부족을 우회하고, 양측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2014년 4월 말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북한을 방문하여 양측 간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북·러 간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14년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채무를 대폭 탕감한 부분이다. 4월 19일 러시아 하원은 구소련이 북한에 빌려준 109억 6000만 달러(약 11조 3797억 원) 중 90%를 탕감하는 협정을 비준하고, 5월 5일 푸틴 대통령은 이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나머지 10%도 북한의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10월에 북한에서는 ‘포베다(POVEDA, 승리)’라는 대규모의 북·러 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북한 철도 현대화와 지하자원의 채굴을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3500km의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데 약 250억 달러에 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⁵²⁾

이러한 포괄적 협력과 함께 두만강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도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다. 2012년 나진-하산 간 54km 철로 개통에 이어 러시아는 북한 나진항 3호 부두를 50년간 임차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12월 나진항을 통해 유연탄 4만 500톤을 한국 포항항으로 운

52) 박병인, “북러의 이해관계 맞물린 협력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기회로 삼아야,” 『민족화해』, vol. 72(2015), 31쪽.

송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초에 이미 2,400개 객차로 6만 4800톤의 석탄을 북한으로 운반했는데, 이는 1988년 이후 최대 물량 규모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향후, 자국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러시아, 유럽, CIS, 한국 등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⁵³⁾

최근 2015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2월 초 출범한 양국 민간경제협력 기구 ‘비즈니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⁵⁴⁾ 양측은 중국과 접경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동해 쪽 나진항으로 이어지는 약 150km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을 러시아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⁵⁵⁾ 이어서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리룡남은 “북한과 하바롭스크 변강 주, 그리고 러시아 전체의 교역량은 정치 분야의 협력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2020년이 오기 전에 양국 교역량을 10억 달

53) Евгения Варакина, “Первый груз по ветке «Хасан-Раджин» отправ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2014.11.26) <http://primorsky.ru/news/common/77646/>(검색일: 2015.02.22).

54) <http://www.nocutnews.co.kr/news/4375600/>(검색일: 2015.03.02).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북-러경제협력회의에서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나선특구에 전력공급을 위한 협정이 진행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러시아 측은 향후 10년 동안 총 600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이 시작되면 2단계로 이를 보완할 새 송전망과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업은 원래 중국 측과 진행되었으며, 두만강-유역의 양국 접경인 중국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에서 나선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를 설치하고 나선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중관계의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자 북한 측은 공급원을 러시아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55) 『연합뉴스TV』, “러-北 경제협력 강화… 北철도 추가 개보수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105241>(검색일: 2015.02.28).

리, 금년 말까지는 3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리용남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농업(하바롭스크 변강 주에 온실 건설), 운송(북한 ‘포베다’ 철도 개·보수), 기계공업, 러시아 자본을 이용한 북한 유용광물 산지 개발, 관광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바롭스크 변강 주와 온라인 교역(e-무역)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교역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⁵⁶⁾

이처럼 북한은 러시아의 대북 접근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양측 간 포괄적 협력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접경지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③ 북한의 대내적 대응

지난 20세기 1990년대 초기에 북한은 나선·선봉 지역에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했으나 미비한 사회기반시설, 외자 관련 법률의 미비, 경제정책의 모호성 등 여러 부정적 요소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었다. 당초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가 세계적인 경제무역지대로 발전되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것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유훈을 철저히

56) 『러시아 포커스』, “하바롭스크 방문 리용남 북 대외경제상, 5년 내로 양국 교역량 10억 달러로 확대,” http://russiafocus.co.kr/news/2015/02/24/5_10_46657.html (검색일: 2015.02.24). 세르게이 세트네프 하바롭스크 부주지사는 2013년 하바롭스크와 북한의 교역량이 불과 약 1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하바롭스크 변강 주의 전체 대외 교역량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교역량에는 변동이 없었다. 현재 하바롭스크 변강 주 내에는 15개의 북한 합작회사가 활동 중이며, 이는 전체 외국 합작회사의 2%를 살짝 넘는 수치다. 현재 하바롭스크 변강 주에 등록된 외국 합작회사 수는 총 715개이다.

시행하여 북한의 중요한 대외무역 거점을 만들어 ‘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9년 12월 나선시는 특별시로 격상되었으며, 이어서 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보충하여 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 5일에는 나선특별시에서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 규정세칙』을 공포하였다.⁵⁷⁾

한편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 중앙급 경제특구(나선경제무역지대)로 재지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의 5개 중앙급 경제특구 및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경제 발전에 김정은 체제의 사활이 걸린 만큼 올해도 이 부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2014년 6월에는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무역성을 통폐합해 외자 유치 주무 부처인 ‘대외경제성’을 신설한 바 있다.⁵⁸⁾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나진-하산 구간 철로 개·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를 통한 물류 운송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가능성도 다대하다. 전문가들도 나진항이 개발되고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되면 이 지

57) 강종철,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제도의 특성과 그 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2011), 58쪽.

58)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1/e20150104174314120280.htm>(검색일: 2015.01.04).

역이 물류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북한도 이러한 나선경제특구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⁵⁹⁾

현재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지만 나선경제특구에서의 투자환경을 개선해가면서, 통관문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수경제지대로서의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⁶⁰⁾ 근래 나진-선봉 지역은 경제적 분위기가 많이 호전되어 대내외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⁶¹⁾ 만약 북한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안정화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9) 전장석,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대봉사계획화의 본질적 내용,” 『사회과학원 학보』, 제2호(2014), 28쪽.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의 지대봉사업은 라선경제 무역지대에 체류하고 있거나 투자활동을 벌리고 있는 외국인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고 투자자들의 기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경제활동이다.”

60) 김은순, “특수경제지대의 발생발전과 유형,” 『경제연구』, 제2호(2014), 57쪽. “특수경제지대는 또한 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된 나라 공업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전통적인 공업구조를 개조하며 수출상품구조도 개변시킨다. 이것은 세계적 범위에서 자금유통과 기술이전을 추동할 뿐 아니라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추동하고 세계시장의 확대를 다그칠 수 있게 하며 세계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61) Mark KIM, “Walk This Way?: Chinese JV Shoe Manufacturing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2015.01). 지역 내에서 2만 달러 정도의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 기업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는 일인당 10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이 중 40달러 정도를 수취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중국 도문지역에서 중국 및 북한 근로자가 100여 달러 받는 것과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5. 결론

지금까지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25여 년의 발전 여정을 살펴본
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각종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동북
아 지역 각국은 이데올로기, 정치제도, 경제체제 등의 분야에 존재하
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러한 것은 협력의 발목을 잡고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되어왔다. 또한 중앙정부의 참여 부족, 지방정부의 여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 협력 지역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목표의 상이
점, 금융과 투자보장 기제의 결핍 등은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사업의
진전을 가로막았다.⁶²⁾

두만강 지역이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실질적인 진전
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상술한 주변 환경 및 개발 기제의 한계도 있지
만 무엇보다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
의 불안정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한은 GTI 회원국을 탈퇴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동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
게다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만강 지역의 다자간 개발협력의 주요한
주체인 북한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역내 협력 사업에 참여할지
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중관계가 2013년 2월의 제3차 북핵실험 이후 정체되어
있지만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고, 북한의 대러시아 접근과 협력 증진
은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긍
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근래 북한의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

62) 吳昊·馬琳, “圖們江區域開發合作20年: 願景何以難成現實,” 『吉林大學社會科學學』, 第52
卷 第6期(2012), 137쪽.

정적 인식, 나선경제특구를 포함한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나선 지역에 대한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진전된 상황 전개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로의 획기적 개방정책 실시는 불명확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개방화의 추세를 보이면서 나선-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 여건 조성 및 관심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인 두만강 지역 일대가 북·중·러 삼각축이 강화되는 현상이 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유관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GTI로 확대 운영 중인 두만강 지역 개발협력 사업에 전향적으로 대처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밀착하는 북·러관계도 견제와 우려의 시선에만 머물지 말고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 접수: 3월 2일 / 수정: 3월 31일 / 채택: 4월 3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1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2).

_____, 『김정일 선집』, 제10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1).

2) 논문

강종철,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제도의 특징과 그 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2011).

계춘봉,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도적 역할론’,” 『경제연구』, 제3호(2005).

김금희, “국제적인 화물중계수송기지로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유리성,” 『경제연구』, 제4호(2014).

김동식, “현 시기 선진기술도입전략에 기초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2011).

김상학,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제1호(2014).

_____, “로씨야 원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 『경제연구』, 제4호(2013).

김세영, “대외경제교류의 경제적 효과타산에서 지켜야 할 중요원칙,” 『경제연구』, 제1호(2015).

김은순, “특수경제지대의 발생발전과 유형,” 『경제연구』, 제2호(2014).

김철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지역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0권 제1호(2014).

김혜선, “제국주의적 경제기구의 침략적, 략탈적 성격,” 『경제연구』, 제4호(2011).

_____, “국제경제기구와 그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제4호(2005).

김홍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2호(2014).

- 량봉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4호(2011).
- 리경영,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착취적 및 략탈적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1호(2014).
- _____, “자본의 국제화에 의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처지의 악화,”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제1호(2011).
- 리명숙, “국제투자의 역할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제3호(2012).
- 리신호,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세계화’의 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경제연구』, 제1호(2006).
- 리정경,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4호(2012).
- 리철성, “최근 시기 동아시아지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협력과 그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호(2013).
- 리행호,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 『사회과학원 학보』, 제4호(2014).
- 박정철, “현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외경제정책의 특징,” 『경제연구』, 제2호(2011).
- 박춘호, “아시아 나라들과의 대외경제협조관계의 특징,” 『경제연구』, 제2호(2013).
- 박춘화,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1호(2014).
- 유철남, “경제무역지대에서 금융업조직의 일반적 원칙,” 『경제연구』, 제4호(2014).
- 심은심, “세계경제를 연구하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3호(2014).
- 전장석,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대봉사계획화의 본질적 내용,” 『사회과학원 학보』, 제2호(2014).
- 정영섭,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3호

(2012).

채광진, “국제대부와 그 형태,” 『경제연구』, 제2호(2012).

최광호, “대외무역에서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1호(2012).

최성일, “미제가 제창하는 ‘세계화’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 제4호(2007).

황금해, “동북아시아나라들과 지역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제1호(2013).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윤승현, 『두만강 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강원: 강원발전연구원, 2009).

제성훈 외,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서울: KIEP, 2014).

조명철·김지연,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서울: KIEP, 2010).

2) 논문

박동훈, “두만강 지역 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2010).

박병인, “북러의 이해관계 맞물린 협력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기회로 삼아야,” 『민족화해』, vol. 72(2015).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2013).

임을출,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적 대응,”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3) 기타 자료

『노컷뉴스』, “北 나선특구 전력공급 중국서 러시아로 전환,” <http://www.nocutnews.co.kr/news/4375600>(검색일: 2015.03.02).

『러시아 포커스』, “하바롭스크 방문 리룡남 북 대외경제상 5년 내로 양국 교역량 10억 달러로 확대,” http://russiafocus.co.kr/news/2015/02/24/5_10_46657.html(검색일: 2015.02.24).

『연합뉴스TV』, “러-北 경제협력 강화… 北철도 추가 개보수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105241>(검색일: 2015.02.28).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1/0200000000AKR20150211048000097.HTML?input=1195m>(검색일: 2015.02.11).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0/2015031000411.html(검색일: 2015.03.10).

『중국 신화통신사』, <http://kr.xinhuanet.com/>(검색일: 2015.02.13).

3. 국외 자료

金祥波·王禹, “双赢戰略: 中朝圖們江區域合作与開發,” 『延邊大學學』, 第45卷 第4期(2012).

毛健·劉曉輝·張玉智, “圖們江區域多邊合作開發研究,” 『中國軟科學』, 第5期(2012).

吳昊·馬琳, “圖們江區域開發合作20年: 愿景何以難成現實,” 『吉林大學社會科學學』, 第52卷 第6期(2012).

王衍達, “圖們江開發困境中的地區环境原因探析,” 『理論探索』, 總第302(2011).

夏莹·魏景賦, “中俄朝經貿合作現狀, 問題及展望-基于圖們江區域開發的視點,” 『商業經濟』, 第10期(2012).

“圖們江開發合作納入國家區域旅游一体化戰略.”

<http://finance.sina.com.cn/roll/20141129/001920951943.shtml>(검색일: 2014.11.29).

Mark KIM, “Walk This Way?: Chinese JV Shoe Manufacturing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회(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2015년 1월).

Евгения Варакина, “Первый груз по ветке «Хасан-Раджин» отправ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http://primorsky.ru/news/common/77646/>(검색일: 2015.02.22).

Perception and Response of North Korea about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Focused on Development of Tumen River Area

Park, Byung In(Kyungnam University)

Tumen River Area which borders o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stagnant though its developmental potentials are high. The causes ar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area, lack of will from central government and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lack of interest from companies etc. Moreover, these are pointed out as important causes - unstability of situation in Northeast Asia due to leave from Greater Tumen Initiative(GTI) an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known that North Korea has a generally negative recognition o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But entering Kim Jeong-eun period, these are noteworthy changes. For example, positive perception o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gress

in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 in North Korea, openness towards foreign countries and will to develop in Tumen River Area by North Korea. If North Korea acts in further progressive and concrete way for reformation and openness based on such changes, Tumen River Area can be a foothol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us to actively use flow of cooperation which is blowing in Tumen River Area to lead North Korea to reformation and openness.

Keywords: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Tumen River Area, Greater Tumen Initiative(GTI),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TRADP), North Korea